

건축도시 정책동향

Vol. 081

건축·도시 AURI POLICY UPDATES

- 법·제도 동향
- 계획추진 동향
- 사업추진 동향
- 시스템구축 및 기타 동향

(auri) 건축공간연구원

건축도시정책동향 Vol.81

발행	건축공간연구원(auri)
발행인	이영범
발행일	2022년 4월 22일
ISSN	2635-5140
기획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집필진	이종민, 방보람, 이담희
주소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8층
연락처	044-417-9868
이메일	brbang@auri.re.kr

[안내]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에서 운영하는 '아우름 사이트(www.aurum.re.kr)'에 접속하면 건축·도시 관련 분야 최신 정책정보를 더욱 빠르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Contents

Vol.81

- 2 **건축·도시 분야 법·제도 동향**
-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실시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및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시행
환경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3월 25일부터 시행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공포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
- 8 **건축·도시 분야 계획추진 동향**
- 문체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 발표
산림청, '2022년 가로수 조성·관리 업무 계획' 수립
서울특별시, 디지털 대전환시대 미래공간전략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
대구광역시, '미래인재도시 대구 기본계획' 발표
대전광역시, '건강도시 조성 종합계획(2022~2025)' 수립
경기도,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계획 수립 완료
경상남도, '제7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 수립·시행
-
- 16 **건축·도시 분야 사업추진 동향**
- 문체부, '제5차 문화도시' 공모
산림청, '나주 금성산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산림청, '2022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균형위,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68개소 선정
서울특별시, 2022년 '제2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시행
부산광역시, '도시 바람길 숲 조성사업(2단계)' 완료

대구광역시, 2025년까지 '빈집정비사업' 추진
인천광역시, 공중화장실에 누구나 편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인천광역시, 노후 공공임대주택 150세대 그린리모델링 완료
울산광역시, '2022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선정
울산광역시, '도시 바람길 숲' 2단계 사업 본격 추진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영상대 인근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 추진
충청북도 증평군,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실증 공모사업' 선정
전라남도 고흥군, '2022년 포스트-어촌뉴딜 시범사업 공모' 선정
경상남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추진
경상남도, 경남형 뉴딜 시군 대표사업 18개 선정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본격 추진

건축·도시 분야 시스템구축 및 기타 동향

30

국토부, 온라인 건축행정서비스 '클라우드 세움터' 제공
대구광역시, '청년 주거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착수
대전광역시, 공간정보를 활용한 3D기반 '디지털 트윈대전' 구축 본격 추진
광주광역시,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 실증사업 선정

건축·도시

AURI Policy Updates

2022년 3월 중앙부처 및 17개 광역시·도에서 발표한 건축·도시 관련 분야 보도자료를 관련 주제, 진행 현황, 담당 기관별로 구분하고, 주요 내용을 알기 쉽게 요약·정리하여 제공합니다.

건축·도시분야 법·제도 동향



국토부, 「도시개발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 예고 실시

도시활력지원과. 2022.03.10.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제도 개선의 후속조치로,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22.3.11~22.4.20.) 및 행정예고(22.3.11~22.3.31.)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는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에서 과도한 민간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국정감사 등에서 제기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여 작년 11월 4일 「도시개발사업의 공공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고, 이어 이를 반영한 「도시개발법」 개정안 등이 국회 논의를 거쳐 지난 12월 9일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도시개발법 시행령」 및 「도시개발업무지침」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 이윤율 상한 규정	-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 시 민간의 이윤율 상한을 민간이 부담하는 총사업비 기준 10% 이내
민·관 공동 도시개발사업의 절차 및 방법 신설	- 사업계획 수립 → 민간참여자 공모 → 참여계획서 평가 →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 협약체결(지정권자 승인 및 국토부장관 보고) → 법인설립
임대주택 계획 절차 및 기준 강화	- 당초 개발계획보다 임대주택이 10% 이상 감소하는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 개발계획 시 반영해야 하는 임대주택 의무 비율 재량 범위를 ±5%p범위로 축소
중앙정부의 협의 및 검사 확대	- 도시개발 구역지정 시 구역면적이 50만㎡ 이상인 경우 국토부장관과 협의(기존 100만㎡ 이상)

국토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및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시행

국토정보정책과. 2022.03.15.

건축
정책

안전

국토교통부는 민간기업도 정부가 구축한 고정밀 공간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보안심사규정」 제정과, 방치건축물을 신속하게 정비하고 지역의 미관 개선과 안전을 확보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방치건축물 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이 3월 17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 등은 관리기관의 보안심사를 거쳐 적합한 보안 관리 체계를 갖춘 민간기업*에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국가공간정보 기본법」이 지난해 3월 16일 개정됨에 따른 후속 조치이다.

* 「공간정보산업법」에 따른 공간정보사업자, 「위치정보법」에 따른 위치정보사업자

「국가공간정보 기본법 시행령」 개정 및 「보안심사규정」 제정의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의 제공 기준	관리기관의 장이 민간기업의 정보 유출 방지 등 보안관리 사항을 심사한 후 제공. 다만 제공하려는 공간정보에 군사시설·국가보안시설에 관한 정보 등이 포함된 경우, 관리기관의 장이 해당 정보를 삭제하는 등 보안 처리하여 제공.
보안심사 전문기관의 지정 기준	관리기관의 장은 민간기업의 공간정보 보안관리 사항을 전문적·체계적으로 심사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 또는 협회 중에서 보안심사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도록 규정. 이 때, 보안심사 전문기관은 심사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술인력, 비밀취급인가, 전담조직 등 지정 기준을 갖추어야 함.
보안심사의 절차 및 방법	관리기관 또는 전문기관은 공개가 제한된 공간정보를 제공 받고자 하는 민간기업이 제출한 보안 대책에 대한 적합 여부를 30일 이내 심사하고, 그 결과를 통지토록 규정.

이번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은 안전사고 우려가 높은 공사중단 건축물을 시장·군수·구청장이 직권으로 철거하는 경우, 그 절차 및 건축주 피해 보상비 산정기준 등 개정 법률에서 위임된 내용과 정비지원기구 확대 등 보완규정 사항을 담고 있다.

【「방치건축물정비법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구분	주요 내용
개정법률에 따른 위임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철거 예정일 결정 시, 그 예정일의 7일 전까지 건축주에게 철거통보서 송부 - 착공 당시 공사원가를 기준으로 투입된 공사비를 산정하고 물리적 감가 등 반영 - 시·도지사가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완화하는 내용을 정비계획에 포함하는 경우에는 공장 등 인접시설과의 이격거리 기준, 승강기 설치기준 등을 완화
제도운영상 보완규정 마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토교통부 장관이 수행하는 방치건축물 실태조사, 정비기본계획수립, 선도사업 추진 등의 업무를 LH와 한국부동산원이 지원. - 방치건축물 정비 촉진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이 선도사업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시장 등과 협의하고, 경미한 계획변경*시 건축주 등과의 협의절차 생략 * 사업기간의 1년 범위 내 변경, 총사업비의 10% 범위 내 변경 등

환경부,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3월 25일부터 시행

탄소중립이행TF. 2022.03.22.

도시
정책

환경

환경부와 2050 탄소중립위원회는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시행령(안)」이 3월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어 3월 25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은 2050 탄소중립이라는 국가목표 달성을 위한 법정 절차와 정책수단을 담은 법률로서 지난해 9월 24일 제정·공포되었으며, 이후 6개월 동안 탄소중립위원회 주관으로 관계 부처 협의를 통해 하위법령을 제정하여 법체계가 완비되었다.

이에 우리나라는 2050 탄소중립 비전을 법제화한 14번째 국가가 되며, 중간목표인 2030년 온실가스 감축목표(NDC)를 40%로 대폭 상향하여 진정성 있는 정책추진 의지를 법제화하였다.

[「탄소중립·녹색성장기본법」 시행에 따른 주요 내용과 향후 전략]

주요 내용	향후 전략
비전·이행체계	중장기 온실가스 감축목표 40%, 국가 탄소중립 기본계획 수립
온실가스 감축	온실가스감축인지예산 적용, '기후변화영향평가' 단계적 도입('22.9~)
정의로운 전환	취약계층·지역 보호, '기후위기적응대책' 5년마다 수립·점검
재정·실천기반	기후대응기금 운영('22~, 2.4조원), 탄소중립실천포인트 제도 시행('22~)

서울특별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개정 공포

도시계획과. 2022.03.10.

건축
정책

도시
정책

서울특별시는 소규모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자치구의 결정권한을 확대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 개정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서울특별시가 3천㎡ 이상 ~ 5천㎡ 미만의 주차장, 문화·체육시설, 청소년수련시설, 시장 등 도시계획시설을 설치하거나 변경할 수 있는 결정 권한을 자치구로 위임한다.

* 현재 도시계획시설 결정에 대한 기존 권한은 부지면적 기준에 따라 3천㎡ 이상은 서울시가, 3천㎡ 미만은 자치구가 가지고 있었음

이렇게 되면 도시계획시설 결정 과정에서 자치구가 시에 입안 요청하고 시가 결정고시를 내리는 일련의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돼 기존에 8개월가량 소요됐던 결정 기간이 2~3개월까지 최대 6개월 단축된다.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SOC가 신속하게 공급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울특별시 시설에 따른 부지면적 위임기준]

연번	도시계획시설	부지면적 위임기준	
		기존	개정
1	주차장	5천㎡ 이하	5천㎡ 미만
2	체육시설	3천㎡ 이하	5천㎡ 미만
3	문화시설		
4	청소년수련시설		
5	시장		
6	공공공지	3천㎡ 이하	5천㎡ 미만 (단, 3천㎡ 초과 면적 축소 폐지 시 시장의 사전동의 필요)

제주특별자치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개정

도시계획재생과. 2022.03.08.

건축
정책

주택
정책

제주특별자치도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에 맞춰 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 건설비율을 규정하는 조례를 개정했다.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별법」 개정내용은 ①소규모주택 정비 관리지역 및 관리계획 지정·고시(신설), ②지정·고시된 관리지역 특례는 제1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제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인 경우 제3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 상향(신설), ③용도지역 상향에 따른 임대주택건설 비율(신설) 등이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은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2분의 1이상이고, 광역적(10만㎡미만) 개발이 곤란한 지역에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계획적·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선정된 지역이다.

도시 주거약자(세입자, 무주택자, 저소득층 등)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용도지역 상향분 용적률 혜택 중 그 일부를 임대주택으로 건설하도록 했다.

[민간에서 시행하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개정 내용]

종전 용도지역 용적률	변경 용도지역 용적률	용적률 혜택	임대주택 공급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	50%	25%(용적률 혜택의 50%)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	50%	25%(용적률 혜택의 50%)

[공공사업시행자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개정 내용]

종전 용도지역 용적률	변경 용도지역 용적률	용적률 혜택	임대주택 공급
제1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00%)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	50%	15%(용적률 혜택의 30%)
제2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250%)	제3종일반주거지역 (용적률 300%)	50%	15%(용적률 혜택의 30%)

건축·도시분야 계획추진 동향



문화부,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 발표

아시아문화중심도시추진단. 2022.03.11.



문화체육관광부는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 종합계획 제3차 수정계획(2022~2028)'을 발표했다.

문화부는 지난해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계획기간이 5년 연장되고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의 운영체계가 개편됨에 따라 이를 반영하기 위해 제3차 수정계획을 수립했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은 광주의 문화적 토대 위에 다양한 아시아 문화가 교류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하는 문화도시를 만들기 위한 국가문화사업으로, 4대 역점과제를 중심으로 추진한다.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의 4대 역점과제 주요 내용]

4대 역점과제	주요 내용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건립·운영	아시아문화중심도시를 위한 핵심 거점시설로서 광주를 시발점으로 하여 전국, 아시아 전체를 위한 문화발전소로 구축
문화적 도시환경 조성	지역 특성별 거점인 문화권 조성을 비롯, 각종 문화인프라 구축 및 중·소 거점의 집중 육성으로 문화적 흐름 확산
예술 진흥 및 문화·관광산업 육성	도시 문화경계의 기반이 되는 예술 진흥, 문화·관광산업 육성, 지역고유 브랜드사업 등을 통해 문화적 고부가가치 창출
문화교류도시로서의 역량 및 위상 강화	문화교류 활성화와 도시운영 인력 양성, 시민참여 유도, 도시 마케팅으로 도시의 문화역량 및 브랜드가치 제고

산림청, '2022년 가로수 조성·관리 업무 계획' 수립

도시숲경관과, 2022.03.04.

국토
정책

도시
정책

환경

산림청은 28일 가로수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에 대응하고, 체계적인 가로수 조성·관리를 위해 금년도 추진할 정책 방향을 담은 '2022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을 발표하였다.

산림청에서는 '2022년 가로수 조성·관리 계획' 수립을 통해 '숲속의 도시, 「아름다운 가로숲」'을 비전으로 △가로수 관련 지침 구체화, △조성·관리 전문성 강화, △평가지표 마련 및 운영, △시민참여 확대, 정책 협의회 운영 등 4가지 전략과제를 추진한다.



[2022 가로수 조성·관리 추진계획]

서울특별시, 디지털 대전환시대 미래공간전략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 발표

도시계획과. 2022.03.03.

국토
정책

도시
정책

환경

서울특별시가 디지털 대전환시대 미래공간전략을 담은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안)을 발표했다. 서울시가 추진할 각종 계획의 지침이 되는 최상위 공간계획이자 「국토계획법」에 따른 법정계획이며, 향후 20년 서울이 지향할 도시공간의 미래상을 담은 장기계획이다.

시는 110명의 전문가, 시민 등의 의견을 고려하여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적·환경적 지속가능성을 담아내는 등 우리 주변을 둘러싼 사회여건을 반영했다.

또한 기존의 경직적·일률적 도시계획 규제에서 탈피하여 다양한 미래의 도시모습을 담을 수 있는 유연한 도시계획 체계로 전환한다.

시민들의 일상생활공간 단위에 주목하여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도시경쟁력을 강화하는 데에도 무게를 더했다.

시는 이를 공간적으로 구현할 6대 공간계획을 제시했다.

[서울특별시 6대 공간계획 주요 내용]

6대 공간계획	주요 내용
보행 일상권	주거용도 위주 일상공간 전면 개편해 도보 30분 '자립생활권'으로
수변 중심 공간 재편	서울 전역 61개 하천 잠재력 활용해 시민생활 중심으로
중심지 기능 강화	3도심 기능 고도화해 도시경쟁력↑...서울도심 '4+1축'으로 활력 확산
경직된 도시계획 대전환	용도지역제→비온드 조닝으로 전면개편, 35층 높이규제 삭제
지상철도 지하화	단계적 지하화로 도심의 새로운 활력공간으로 전환, 가용지 부족문제 해소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자율주행 등 미래교통 인프라 확충, 모빌리티 허브 서울 전역에 구축

대구광역시, '미래인재도시 대구 기본계획' 발표

청년정책과. 2022.03.17.

도시
정책

환경

대구광역시는 3월 17일(목) 오후 2시 시청별관 대강당에서 상공계, 학계, 유관기관, 시민사회, 청년 등 인재양성 관련분야의 대표 21명으로 구성된 '대구 미래인재도시 위원회'를 처음으로 개최해 미래인재도시 대구의 향후 5년간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추진 주체별 실행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미래인재도시 대구 기본계획'은 수도권 쏠림, 일자리 문제, 청년유출 등 지역이 겪고 있는 구조적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 내고, 인재양성부터 활용·정착·유입을 통한 인재와 지역의 선순환 발전구조를 지향하기 위한 기본 로드맵이라 할 수 있다.

미래인재도시 대구 기본계획은 '더 나은 미래를 만나는 컬러풀 인재도시'를 비전으로 4대 정책방향 및 9대 프로젝트로 구성, 중장기 계획을 포함한 39개의 주요 실행사업을 담고 있다. 핵심 추진전략은 차별화된 기회와 매력적인 환경 제공이다.

국가 메가프로젝트를 포함한 예산은 2026년까지 향후 5년간 약 4조 4,017억 원의 규모이다.

올해 시행하는 미래인재도시 대표사업은 '대구 청년 꿈꾸는대로 응원펀딩'이다. 청년들의 다양한 꿈을 응원하는 시민참여 플랫폼을 구축하여, 인재의 가치 창출과 도시변화를 일으키는 혁신 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으로써 5년간 컬러풀 혁신인재 5천 명을 양성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건강도시 조성 종합계획(2022~2025)' 수립

건강보건과. 2022.03.07.



대전광역시는 '건강도시 대전' 조성을 위한 큰 그림인 '건강도시 조성 종합계획(2022 ~ 2025)'을 수립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수립한 건강도시 종합계획은 2022년부터 2025년까지 실천할 건강도시 4개년 중기계획으로 '100세까지 시민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한 대전'을 비전으로 설정했다.

이를 위해 ①위드 코로나 대비를 위한 공공보건 정책강화, ②마음건강 증진을 위한 심리지원 체계구축, ③기후변화 대응을 통한 건강환경 여건개선, ④신체활동 증진을 위한 걷기 좋은 도시조성 등을 4대 전략으로 설정하고, 12개 과제 55개 세부사업을 계획했다.



[대전광역시 건강도시 조성 종합계획(2022~2025) 개요]

경기도,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계획 수립 완료

도시재생과. 2022.03.16.

건축
정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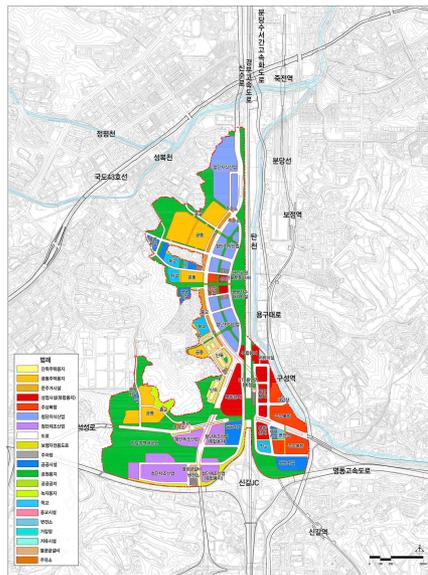
도시
정책

경기도와 용인시, 경기주택도시공사, 용인도시공사가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이 개발계획 수립을 완료했다.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부지조성 공사에 들어갈 전망이다.

경기도는 용인시가 최근 '경기용인 플랫폼시티 도시개발사업 개발계획'에 대한 용인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완료하고, 16일 개발계획 수립을 고시했다고 밝혔다.

역세권 주변에는 복합환승센터와 연계된 복합용지(14만㎡)를 계획하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 도심 중심부에 복합시설(주거, 업무, 상업, 문화 등)을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대중교통 지향형 개발(Transit Oriented Development)을 추진할 방침이다.

아울러 사업구역 내 산림을 복원하고 중앙공원(플랫폼 파크)과 도시를 연결하는 녹지를 배치해 주거 만족도가 높은 친환경 도시로 조성할 계획이다.



[토지이용계획도]

[주택건설배분계획도]

경상남도, '제7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 수립

관광진흥과. 2022.03.17.



경상남도는 향후 5년간 경남 관광의 청사진을 담은 '제7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을 수립하였다고 17일 밝혔다.

제7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은 국가 단위의 상위 계획인 '제4차 관광개발기본계획(문체부, 2022~2031)'에서 제시된 경남권역의 관광개발 방향에 대한 구체적 실행계획으로, 「관광진흥법」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법정 계획이다.

경상남도는 제7차 경남권 관광개발계획에 따라 향후 5년간 관광(단지 개발 12개소 1조 6,731억 원(민자 포함), 신규 문화관광자원 개발사업 32개소 5,312억 원, 생태·녹색관광자원 개발 사업 10개소 1,410억 원 등 총 2조 3,453억 원을 투자할 계획이다.



[제7차 경남권 관광 개발계획]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 수립·시행

여성가족청소년과. 2022.03.10.

도시
정책

환경

제주특별자치도는 아동의 4대 권리*를 보장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위해 「제주특별자치도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22년 제주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수립·확정했다.

* 유엔아동권리 4대 기본권 : 생존권, 보호권, 발달권, 참여권

시행계획은 아동 최우선의 관점에서 아동권리의 보호와 증진을 통해 유엔아동권리협약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실현하는 아동친화도시 조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총 사업비 487억 원을 투입하여 5개 추진전략*과 13개 중점과제에 따른 68개 세부과제로 구성된 아동친화도시 조성 시행계획을 추진할 예정이다.

* ① 권리주체 아동권리 실현 ② 생활이 즐거운 놀이문화 환경 조성 ③ 건강하고 균형있는 발달 지원
④ 안전한 보호와 촘촘한 돌봄 체계 구축 ⑤ 아동친화도시기반 구축

올해 중점 추진사업은 아동참여위원회 구성, 아동청소년 제안 플랫폼 운영, 아동권리 옴부즈퍼슨 운영, 아동권리보장 인식 확산을 위한 홍보 강화, 보호종료아동 자립지원체계 구축 및 지원확대, 놀이 중요성에 대한 부모교육 확대 등이다.

도는 지속가능한 아동친화정책 추진을 위해 도교육청 등 관련 부서와 협업을 강화하는 등 정책추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노력해 나갈 방침이다.

건축·도시분야 사업추진 동향



문체부, '제5차 문화도시' 공모

지역문화정책과. 2022.03.31.



문화체육관광부는 3월 31일(목)부터 6월 30일(목)까지 문화적 기반과 역량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제5차 문화도시'를 공모한다.

'문화도시'는 지역별 특색 있는 문화자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해 문화창조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한 도시를 말한다. 문화도시는 문화도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체부 장관이 최종 지정한다.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에는 지역이 스스로 수립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따라 문화장소(문화거점) 조성 및 재생, 시민 주도형 문화콘텐츠 발굴 및 활용, 문화인력 양성 등을 추진할 수 있도록 5년간 예산(국비, 지방비 분담)을 지원한다.

문체부는 '19년부터 '21년까지 제1차 문화도시 7곳, 제2차 문화도시 5곳, 제3차 문화도시 6곳 등 총 18곳의 문화도시를 지정했다. 현재 제4차 예비문화도시 16곳이 1년간('21년 12월~'22년 11월)의 예비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예비사업 실적평가를 통해 올해 말에 제4차 문화도시로 최종 지정될 예정이다.

문체부는 지자체가 제출한 문화도시 조성계획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22년 9월에 제5차 예비문화도시를 지정하고, 1년간('22년 10월~'23년 9월)의 예비사업 추진실적을 평가해 '23년 10월에 제5차 문화도시를 최종 지정할 계획이다. 5차 문화도시로 지정된 지자체는 5년간('24년~'28년) 예산 최대 200억 원(국비 100억 원, 지방비 100억 원)을 투입해 문화도시 조성사업을 추진하게 된다.

산림청, '나주 금성산 도시숲 조성사업' 추진

산림경영과. 2022.03.10.

도시
정책

환경

서부지방산림청은 나주 금성산에 국비 20억 원을 투입해 도시숲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나주 금성산 도시숲은 기 조성된 금성산 유아숲체험원, 나주 숲 체험원 등 주변 산림복지 시설과 연계하여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산림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서부지방산림청은 2022년 3월 10일 실시설계용역 착수보고회를 시작으로 2022년 5월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한다.

산림청, '2022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선정

목재산업과. 2022.03.21.

국토
정책

도시
정책

환경

산림청은 콘크리트 중심의 도시를 목재로 전환하여 탄소 중립 도시를 실현하는 '2022년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 대상지 5개소를 지자체 공모사업을 통해 선정하였다.

'목재친화도시 조성사업'은 친환경 탄소저장 소재인 목재를 이용하여 도시의 거리와 생활 속 사회 기반(SOC)을 조성하고, 생애주기 목공체험 프로그램 등을 비롯하여 지역별 목재 교육·문화 기반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대상지로 선정된 시·군·구(가나다순)는 강원 춘천, 경북 봉화, 대전 유성, 전남 강진, 전북 무주이다.

주요 사업은 ①지역 목재를 활용한 목재특화거리 조성, ②공공 목공체험센터 등 목재 교육·문화 진흥, ③지역 목재 산업 촉진과 일자리 창출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이다.

균형위,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대상지 68개소 선정

관계부처합동. 2022.03.10.

국토
정책

도시
정책

환경

안전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2022년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신규 사업대상지 68개소를 선정했다고 밝혔다.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은 취약지역의 주민들이 최소한의 삶의 질(National Minimum)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주거, 안전, 위생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생활여건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이번 선정된 68개소는 도시 10개소, 농어촌 58개소로, 시·도별로는 전남 15개소, 경남 11개소, 경북 10개소, 충북·전북 9개소 등 총 10개 시·도가 포함되었다.

올해 선정된 전체 사업대상지에 대해서는 금년 약 105억 원을 시작으로 향후 총 1,050억 원 규모의 국비(도시 약 300억 원, 농어촌 약 750억 원)가 지원될 계획이다.

주요 사업 내용을 보면, 슬레이트 지붕 개량, 노후주택 정비 등 주택정비와, 담장·축대 정비, 소방도로 확충 등 안전시설 정비, 재래식 화장실 개선, 상·하수도 정비 등 생활 인프라 확충과 더불어, 주민 공동체 활성화를 위해 노인 돌봄과 건강관리 프로그램 등 휴먼케어(human care)와 주민역량강화사업 등도 지원한다.

선정지역에 대한 예산집행 등 사업관리는 도시지역은 국토교통부, 농어촌지역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맡게 된다.

서울특별시, 2022년 '제2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 시행

디자인정책과. 2022.03.16.

도시
정책

환경

서울특별시는 벤치, 블라드, 휴지통, 펜스 등 공공시설물 중 우수한 제품을 대상으로 '제28회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2009년부터 시행된 <서울우수공공디자인 인증제>는 미학·기능적으로 우수한 공공시설물을 서울시가 인증하는 제도로 오는 4월 18일(월)부터 서울우수공공디자인 홈페이지를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인증 신청대상은 벤치, 휴지통, 자전거보관대, 블라드 등 시장에 출시된 공공시설물 또는 출시예정인 시제품(총20종)이며, 그 간 인증된 제품은 총 1,376점이다.

시는 올해부터 인증제 시행 횟수를 연2회에서 연1회로 줄이되, 현행 2년인 인증기간을 3년으로 연장(「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진흥 조례 시행규칙」 제3조제2항 개정)하여 재인증에 소요되는 부담을 줄이고자 하였다.

부산광역시, 도시 바람길숲 조성사업(2단계) 완료

산림녹지과. 2022.03.03.

도시
정책

환경

부산광역시는 사업비 65억 원을 투입하여 월드컵로, 아시아드로, 백양대로 일원 등 3곳에 도시 바람길숲 조성을 완료하였다고 밝혔다.

지난해부터 추진한 이번 2단계 사업은 월드컵로, 아시아드로, 백양대로 일원에 느티나무 등 30종 7만3천803주를 식재했다.

시는 실생활에서 소음 및 미세먼지 저감 등 탄소중립이 실현할 수 있도록 도로 폭을 줄여 다층형 수림대를 조성하였으며, 도시 바람길숲이 도심 녹지축을 연결할 뿐만 아니라 가로수 및 가로화단 조성을 통해 생활권 내 그늘 제공과 경관개선, 안전사고 예방 등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구광역시, 2025년까지 ‘빈집정비사업’ 추진

도시정비과. 2022.03.03.

건축
정책

환경

안전

대구광역시는 2025년까지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해 ‘빈집정비의 기본 방향’이 포함된 정비계획을 수립해 지역 실정에 맞는 체계적인 사업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올해 1월에 수립한 빈집정비계획은 전수 실태조사에 의한 빈집현황을 토대로 구·군의 지역 현황에 대응하는 맞춤형 정비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관리 및 철거 등 정비 방안을 마련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된다.

‘빈집정비사업’은 장기간 방치돼 도시환경을 저해하고 각종 범죄와 화재 등 안전사고의 위험이 있는 빈집을 철거해 임시주차장·쌈지공원·간이쉼터 등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정비가 필요한 3~4등급 빈집을 우선으로, 안전사고 위험성과 사업의 효과, 미관 및 주거환경 개선 정도 등을 고려 후 대상을 선정한다.

8개 구·군의 빈집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1년 이상 거주 또는 사용하지 않는 빈집이 3,546호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으며, 등급별로는 비교적 상태가 양호한 1·2등급 빈집은 2,002호, 상태가 불량해 정비 대상인 3·4등급 빈집은 1,544호이다.

2013년부터 지속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빈집정비사업은 올해에도 7억 8천만 원의 예산을 들여 빈집 25동을 정비할 계획이며, 현재까지 사업이 완료된 370동의 운영실태도 함께 점검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할 예정이다.

인천광역시, 공중화장실에 누구나 편한 유니버설디자인 적용

수질환경과. 2022.03.20.

건축
정책

환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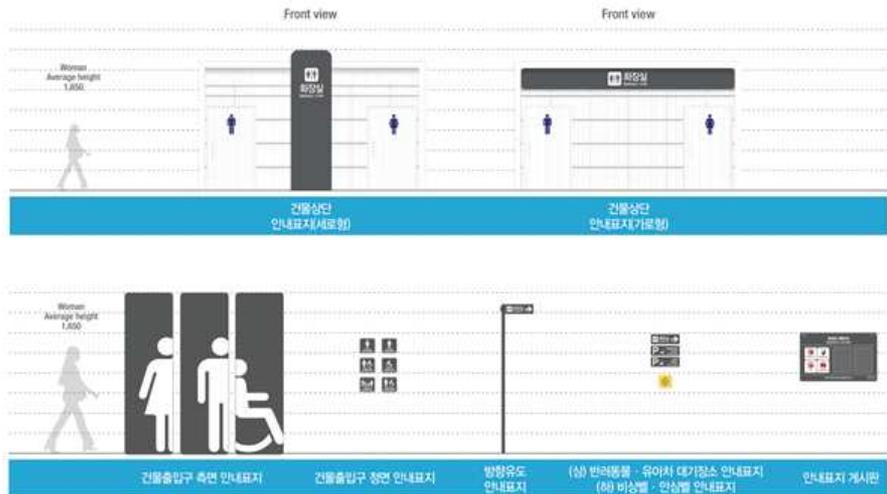
안전

인천광역시는 올해 신·개축 사업 예정인 공중화장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필수적용 한다고 밝혔다. 시는 올해 사업비 15억 7천여만 원(군·구비 포함)을 투입해 5개 군·구(중구, 미추홀구, 계양구, 강화군, 옹진군), 9개소의 신·개축 공중화장실에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할 계획이다.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하면 밖에서는 누구나 공중화장실임을 쉽게 알아볼 수 있는 대형 그림문자 안내 표지판이 설치된다. 한편 화장실 내부에서는 누구나 접근 및 사용이 편리하도록 높이가 다른 세면대가 설치되고, 변기·세면대 등 흰색의 위생도기와 대비되는 마감재를 사용해 사용자의 안전을 높인다. 공중화장실 안내 표지판은 인천광역시 8차 표준디자인을 적극 반영할 예정이다.

특히, 공중화장실에서의 범죄나 부주의로 인한 사고 예방을 위해 비상벨, 안심스크린 등 안전관리 시설과 영유아를 동반하는 사람들에게 필요한 기저귀 교환대 등도 법적 기준에 따라 함께 설치한다.

[화장실 안내표지 디자인 가이드라인]



[유니버설디자인 안내표지판 예시]

인천광역시, 노후 공공임대주택 150세대 그린리모델링 완료

주택정책과. 2022.03.23.



인천광역시는 노후된 공공임대주택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그린 리모델링 사업을 완료하고 23일 입주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이후 침체된 경제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한국판 뉴딜 사업의 일환으로 국토교통부 공모심사를 거쳐 2021년 선정됐다. 총 43억 원의 사업비(국비 23억, 시비 16억, 인천도시공사 4억)가 투입됐다.

준공 후 15년 이상 경과한 연수1차 시영아파트 12평형 50세대와 선학 시영아파트 12평형 100세대 등 총 150세대를 대상으로, 주방 인테리어, 단열 성능향상, 창호 교체, 발광다이오드(LED) 전등 설치 등 공사가 이뤄졌다. 지난해 8월 착공해 12월 공사를 완료했다.

울산광역시, '2022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 선정

관광진흥과. 2022.03.10.



울산광역시는 문화체육관광부 주관 '2022년 스마트관광도시 조성사업'에 최종 선정됨에 따라 국비 35억 원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이번 공모는 교통연계형, 관광명소형, 강소형 3개 유형으로 진행됐으며 울산시는 공항, KTX역, 광역전철 등 교통중심(허브)으로서의 강점을 활용한 '교통연계형'에 공모하여 최종 선정되었다.

이번에 선정된 '울산 스마트관광도시 조성 사업'은 올해 말까지 총 70억 원의 사업비가 투입되어 '장생포 고래문화 특구'를 중심으로 정보통신기술(ICT)과 생태관광을 융합한 '스마트 생태관광 도시 울산'을 구현한다. 주요 내용을 보면, 반려고래 웹/앱(플랫폼) 구축, 알려주고(Go), 고래타고(Go), 고래보고(Go), 구매하고(GO) 등의 과제가 추진된다.

울산광역시, '도시 바람길숲' 2단계 사업 본격 추진

녹지공원과. 2022.03.29.



울산광역시가 '도시 바람길숲 조성' 2단계 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한다. 울산시는 2019년 산림청의 '도시 바람길숲 조성 공모사업'에 선정됐으며 지난 2020년부터 총 사업비 200억 원을 투입해 도시 전역에 25ha의 숲을 조성하는 사업을 펼쳐 왔다.

올해 추진하는 2단계 사업에는 90억 원이 투입되며, 도심 주요 도로를 따라 '띠녹지'를 조성한다. 번영로 산업로 염포로 처용산업로 회야강 하구 우정혁신도시 공원녹지와 그린애비뉴 등 7개 지역에 62만여 그루의 나무를 심어, 신선한 바람의 빠른 확산을 돕고 도심 속 공원녹지 기능을 강화한다.

[울산광역시 지역별 도시 바람길숲 조성계획]

지역	조성계획
번영로(0.7km), 산업로(2.6km) 염포로(6.5km)	기존 가로수 사이에 나무를 심어 띠녹지(수벽)를 조성
처용산업로(0.8ha, 1.6km) 회야강 하구(2.8ha, 1.6km)	가시나무, 광나무를 심어 녹지대 조성
우정혁신도시 공원녹지(1.9ha) 그린애비뉴(3.4ha, 4.1km)	느티나무, 홍가시나무를 심어 기존 공원녹지에 부족한 수목 보식

오는 11월 2단계 사업이 끝나면, 울산 '도시 바람길숲 조성'은 모두 마무리 된다. 울산시는 해당 사업이 완료되면 도심 속 미세먼지가 25% 가량 감소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충청북도 증평군,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실증 공모사업' 선정

정보통신과. 2022.03.18.

국도
정책

도시
정책

충청북도와 증평군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공모사업인 '2022년도 스마트 빌리지 서비스 발굴 및 실증 사업' 대상으로 최종 선정됐다. 이번 공모에 선정된 사업은 '무인방제드론과 자율주행트렉터 간의 스마트팜 통합플랫폼 구축사업'으로 인구 고령화로 생산성 감소를 겪고 있는 농촌현실에 대응하기 위해 3년간 실증을 통한 모델 개발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주관기관인 증평군은 사업비 15억2천만5백만 원(국비 8, 도 1, 군 2, 참여기업 4.25)을 확보해 올해 말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스마트팜 통합 플랫폼 구축사업의 주요 내용은 드론 자동충전·자동약제 주입 기능의 드론스테이션 개발, 드론 및 농작업상황·작물식생지수·대기질 측정 등 농업정보 빅데이터 구축, 드론 RTK-GPS 정보 실시간 공유, 트렉터·드론간 통합운영관리시스템 구축 등 실증을 통해 통합 모델을 개발할 계획이다.



[충청북도·증평군 스마트빌리지 서비스 실증 공모사업 서비스 구현도]

전라남도 고흥군, '2022년 포스트-어촌뉴딜 시범사업 공모' 선정

섬해양정책과. 2022.03.01.

국도
정책

도시
정책

환경

전라남도는 어촌 활력 증진을 위한 해양수산부의 '2022년 포스트-어촌뉴딜 시범사업 공모'에서 고흥군이 선정됐다고 밝혔다. 국비 49억 원을 포함, 총 70억을 들여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올해 고흥군과 함께 충남 태안군, 경남 거제시, 강원 동해시, 4곳이 선정됐다. 어촌뉴딜 시범사업은 낙후 어촌에 활력을 증진하고, 인구 감소를 막기 위해 추진한다.

건강, 아동 돌봄, 교육, 문화 등 어촌 생활 서비스 수준을 높이고, 방문 위주의 관계 인구를 지역에 정착해 살아가는 정주 인구로 전환하는데 집중한다.

기초지자체와 어촌 앵커조직이 함께 지역 주민이 중심인 마을기업을 통해 다양한 주민 참여형 소득사업을 추진한다. 창업플랫폼과 시설 확충, 주민역량 강화 등 지속 가능한 어촌어항 재생 모델을 구축하게 된다.

고흥군은 거금대교로 육지와 연결된 거금도 금진항을 중심으로 인근 득량만과 소록도, 녹동항과 연계해 사업을 추진한다.

금진항의 계류시설과 거금도 드림센터, 갯벌체험장, 마을회관 정비 등 기반시설 조성 and 공유플랫폼, 거금도 공정여행, 체험학교 등 사업 운영을 통해 신규 일자리를 창출할 것으로 기대된다.

경상남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 사업’ 추진

건축주택과. 2022.03.22.

건축
정책

주택
정책

환경

경상남도는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자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후화된 영구임대주택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한다.

이번 사업은 영구임대 50년 공공임대주택 중 준공된 지 15년 이상 경과한 노후 공공임대주택의 시설을 개선해 쾌적한 주거환경을 만들기 위해 추진한다. 도내에는 창원시의 개나리3차시영임대아파트, 통영시의 도천·미수아파트 등 3개 단지 1,290호가 사업대상자로 선정되어 노후화한 시설을 개선한다.

도는 올해 노후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에 8억3,300만 원의 예산을 투입해 공용부분의 공동배관 교체, 세대분전반 교체, 수전 교체, 외벽도장 및 옥상 방수 등을 실시할 예정이며, 4월 공사발주 및 착공할 계획이다.

[경상남도 노후 공공임대주택 시설개선사업 사업내용]

사업유형	사업항목
배리어프리	편의시설, 장애인 경사로, 승강기 설치, 자동문 등 6개항목
생활안전	CCTV성능개선, 공동배관 교체, 수배전반, 굴뚝철거, 세대분전반, 난간 및 논슬립 설치 등 18개 항목
에너지절약	복도·발코니새시 설치, 콘덴싱보일러 교체, LED보안등·LED등기구 교체, 세대외부창호 등 7개 항목
성능및기능개선	동피로티 개선, 수전교체
커뮤니티지원	주민휴게시설
단지환경조성	외벽도장

경상남도, 경남형 뉴딜 시군 대표사업 18개 선정

뉴딜추진단. 2022.03.30.



경상남도는 코로나19 위기 극복을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경남형 뉴딜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시군을 대표하는 사업 18개를 선정하여 발표하였다.

이번에 선정된 대표사업은 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스마트·그린·사회적 뉴딜 사업의 성격에 부합하면서 사업계획을 구체화한 사업이다.

[경상남도 시군 대표사업 선정 현황]

사업 분야	지역	주요 사업내용
스마트 뉴딜분야	함양군	스마트 물류단지 조성사업
	김해시	버츄얼 기반 미래차 부품 고도화사업
	거창군	스마트승강기 실증 플랫폼 구축사업
그린 뉴딜 분야	창원시	수소산업특별시 조성
	사천시	삼천포 무지갯빛 생태탐방로 조성
	함안군	질날늪 도시생태축 복원사업
사회적 뉴딜 분야	밀양시	밀양형 아이키움 배움터 사업

경상남도는 이들 시군 대표사업을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국비예산 확보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계획이다. 사업 추진 시 문제점이나 애로 사항이 생길 경우 중앙부처에 제도 개선 등을 건의하고, 2023년도 정부예산 반영을 위해 예산정책협의회, 지방재정협의회 등에 대표 사업이 반영되도록 사업담당 주관부서에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제주특별자치도, '2022년도 유니버설디자인 도시' 조성 본격 추진

도시디자인담당관. 2022.03.07.

도시
정책

환경

제주특별자치도는 2018년도부터 추진해온 유니버설디자인 시범사업과 관련해 올해 아라2근린공원 등 5개소를 확정하고, 순차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사업 대상지는 아라2근린공원, 서귀포시 치유의 숲, 신산공원, 탐동광장, 탐동1근린공원 등 5곳으로 총 5억 원을 투자하고 유니버설디자인을 적용해 접근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킨다.

아라2근린공원과 치유의 숲은 경사로를 개설해서 이동약자·노약자의 공원 이용성 및 접근성을 높일 예정이다.

제주시 구도심에 자리잡아 연간 100만 명이 이용하는 신산공원은 기존 산책로에 보행 참을 설치해 휠체어, 유모차 등을 이용하는 이동약자의 보행환경을 개선한다.

작년 활성화 구역으로 지정 고시한 탐동1근린공원은 기존 화장실을 리모델링하고 부대시설을 개선하며, 탐동광장은 경사로를 추가 설치해 이동약자의 안전성과 편의성을 증진시킨다.

이 사업은 공공디자인진흥위원회 심의와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BF) 인증 등 행정절차를 마무리한 뒤 6월 착수해서 10월에 공사를 마칠 계획이다.

세종특별자치시, 한국영상대 인근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 사업’ 추진

경관디자인과. 2022.03.04.

도시
정책

환경

안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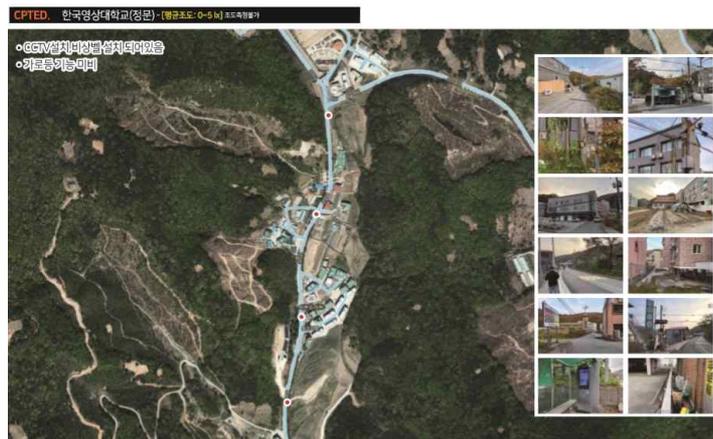
세종특별자치시가 한국영상대 원룸가 일원에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셉테드(CPTED, Crime Prevention Through Environmental Design))’ 사업을 추진한다.

시는 앞서 지난 2월 수립한 범죄예방 도시환경디자인 기본계획과 안전도시위원회, 경찰 및 지구대의 의견을 반영해 환경개선이 필요한 지역 5곳을 선정했다.

이 중 한국영상대 일원 원룸가를 개선이 시급한 곳으로 판단해 우선사업대상지로 선정했다. 해당 대상지는 현장조사에서 보행안전이 취약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한, 도심과 동 떨어져 있어 경찰 출동시 시간이 소요되고 골목길 내 가로등, 폐쇄회로텔레비전(CCTV), 비상벨 설치 또한 미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따라 시는 총 예산 2억 원을 투입해 안심벨설치, 산책로 주변 차폐·식재 등에 따른 은닉장소 제거, 야간조명 강화, CCTV 안내판 시인성 강조 등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기본설계 단계부터 공사까지 지역 주민, 대학교 관계자, 대학생, 전문가, 관계 기관 등의 의견을 수렴해 사업의 완성도를 높이고 범죄발생 우려를 사전에 제거할 예정이다.



[한국영상대 원룸가 셉테드(CPTED) 기본계획]

건축·도시분야 시스템구축 및 기타 동향



국토부, 온라인 건축행정서비스 '클라우드 세움터' 제공

건축정책과. 2022.03.01.

건축
정책

국토교통부는 2일부터 전국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클라우드 기반 건축행정시스템(클라우드 세움터)를 이용하여 신속하고 안정적인 건축행정서비스를 제공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경제자유구역청*의 건축 인허가 민원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기존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가 구축되지 않아 국민들이 직접 방문하여 수기 처리하는 등 비효율적인 행정처리로 어려움이 있었다.

* 인천, 경기, 동해안, 충북, 대구경북, 광주, 광양만, 부산진해, 울산 총 9개 지역

앞으로는 경제자유구역청에서도 클라우드 세움터를 통한 건축행정 서비스가 개시되어 건축행정 편의성 증진과 신속한 업무처리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클라우드 세움터의 비대면 행정서비스 강화 주요 내용]

서비스	주요 내용
온라인 심의회의 지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 업무가 확산되면서 건축심의회의를 비대면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온라인을 통한 심의자료 공유, 심의회의 진행, 결과관리 등의 서비스 지원
건축물대장 온라인 도면발급 범위 확대	건축물 소유자만 온라인으로 발급받을 수 있었던 도면을 감정평가사, 임차인, 부동산중개인 등도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한 평면도 및 배치도를 발급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민원 지원	빈집 및 소규모 주택정비를 위한 조합설립인가, 사업시행계획인가 등 민원을 지자체 방문 없이 온라인을 통하여 신청하고 지자체 담당자 승인처리할 수 있도록 개선

대구광역시, '청년 주거지원 플랫폼 구축사업' 착수

건축주택과. 2022.03.16.



대구광역시는 주택가격의 상승에 따른 적정수준의 주택 물량 부족과 전월세 자금 대출이자 등으로 주거 부담을 겪고 있는 청년·신혼부부의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해 지난 9월 주거종합계획인 '청년주거안정 패키지 사업'을 마련했다.

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확보하는 동시에 청년 등 수요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주거지원 정보를 제공하고 사업에 대한 신청·접수·확정까지 원스톱으로 확인 가능한 온라인 플랫폼 '청년 주거안정 상담서비스 플랫폼'을 구축한다.

구축 중인 플랫폼의 주요 서비스로는 청년주거안정 패키지 지원 사업 원스톱 신청 및 접수, 주거지원에 대한 상담서비스 제공, 타 주거 및 청년지원 관련 플랫폼 연계, 주거지원 및 청년·신혼부부와 관련된 유익한 정책의 제공으로, 단순한 사업 신청과 접수뿐만이 아니라 청년층에게 실질적 도움이 되는 다양한 정보공유의 장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주요 추진 일정으로 6월 중 올해부터 시행하는 대구시 청년층 주거지원 주력사업인 ①청년 전월세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②청년 전세 임차보증금 반환보증료 지원, ③귀환 신혼부부 임차보증금 이차지원 사업 접수를 시작하고, 시범운영을 통해 드러난 불편사항과 사용자 의견을 수렴·보완해 8월에 정식 오픈한다.

2023년에는 대구형 월세 지원과 청년희망주택 보증금 이차지원 접수까지 플랫폼 지원 범위를 더욱 확장하고, 공공임대주택 및 청년희망주택 공급 정보제공, 청년포털 및 우리동지대구 플랫폼 연계 등 청년주거안정 지원사업 외의 서비스를 추가하여 생활밀착형 청년주거종합포털로 거듭날 계획이다.

대전광역시, 공간정보를 활용한 3D기반 '디지털 트윈대전' 구축 본격 추진

토지정보과. 2022.03.04.

국도
정책

도시
정책

대전광역시는 2일 오후 '디지털 트윈대전' 구축사업의 본격적인 추진을 알리는 '정보화전략계획(ISP) 및 실증사업' 추진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디지털 트윈대전' 사업은 대전시 전역을 현실세계와 유사한 가상의 공간에 3D로 구현하고, 각종 행정데이터를 이용한 모델을 개발하여 시뮬레이션을 통해 문제를 사전에 예측하고 예방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이다.

시는 우선 올해부터 2023년까지 서구 둔산동 등 9개동 일원에 시민들과 함께 만드는 '디지털트윈 기반 지능형 재난 예측플랫폼'을 구축해 실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정보화전략계획(ISP)을 수립하고 민·관·산·학 협업체계를 구축하여 대전시 전역으로 디지털 트윈대전' 사업을 확대한다는 구상이다.

광주광역시,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 실증사업 선정

안전정책관실. 2022.03.03.

도시
정책

안전

광주광역시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이 추진하는 2022년도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침수 스마트 대응시스템 실증 사업에 선정됐다고 3일 밝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상황에 대해 지역별 특성을 반영한 실시간 상황 분석·예측, 대응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고 보고 이 사업을 추진했다.

시는 도심 홍수 피해를 사전 예측하고 관리하기 위해 침수지역에 대한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 개발에 들어간다. 이번 사업에서는 침수지역에 대한 환경정보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디지털트윈 기반 도시침수 시뮬레이션, 기존 데이터 수집 및 연계, 침수정보 빅데이터 분석 시스템 등을 개발할 예정이다.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는 국내 건축·도시 분야에서 생산되는 다양한 기록자료와 정책정보 및 학술연구정보 구축을 통하여, 건축물 및 공간환경 정책수립과 사업추진을 위한 지적 토대를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습니다.

2007년 「건축기본법」 제정 이후 건축물 및 공간환경 조성을 위하여 추진되는 사업과 관련 한 각종 기록자료에 대한 관리의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건축정책 수립을 지원하고, 학술문헌 및 연구정보 구축을 통해 건축·도시 분야의 관련 정보와 지식을 체계적으로 축적하고 보급하는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30116] 세종특별자치시 가름로 143, KT&G세종타워B 8층, 건축·도시정책정보센터
architecture and urban policy information center,
KT&G Sejong Tower B 8F, Gareum-ro, Sejong-si, 30116, Korea



9 772635 514009
ISSN 2635-5140